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추석 연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감염 재생산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의 2단계 조치 일부 유지, 잠복감염의 가능성 등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면서까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의 접점이 많아서
더욱 빈틈없는 조치가 필요했던
금융권 여러분의 방역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준비 필요성]

지난 3월 WHO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전세계 일일 확진자수가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 '20.10.9일, WHO는 24시간내 보고된 전세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5만 766명
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인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이제 시작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디지털화, 건강·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비대면 산업, 의료·바이오, 녹색산업 등이
유망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산업 재편도 불가피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가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경제가
소득·교육수준 및 인종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10.5일, "The Covid Economy Carves Deep Divide Between Haves and Have-nots"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의 초저금리·유동성 확대로 인해
고수익·고위험 추구, 부채 증가 등
금융불안요인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중점 추진하면서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추진경과]

지난 7.24일,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한 금융정책 방향으로
①혁신성장 지원, ②디지털금융, ③포용금융, ④금융안정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新성장기업 및 한국판 뉴딜에 대한 전략적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30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중기부·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32개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현재까지 2,111억원(대출 1,201억원, 보증 9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회차 선정부터는 중기부·산업부 이외에도
과기부·복지부·국토부 등으로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 (1회차) 산업부·중기부 → (2회차~) 과기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환경부 추가

한국판 뉴딜의 경우,
뉴딜 사업에 대한 시장 참가자, 투자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미래 자율주행차, AI, 5G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가고자 합니다.

뉴딜 투자설명회는

산자부, 과기부 등 담당 부처와 분야별 사업시행 발주자(developer),
운용사 등 민간투자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방향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금융과 관련하여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및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 및 신원확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금융 시대에 부합하도록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용금융과 관련하여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前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등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9월 정부안 국회제출

** 현재 정부안 입법예고중

네 번째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조치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코로나19 지원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마지막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권에서는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말씀]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다가올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This storm will pass. But the choices we make now could
change our lives for years to come.”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칼럼*에서 했던 말입니다.

* '20.3.20일, Financial Times, "The World After Coronavirus"

금융당국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를
선진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를
네 가지 방향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으로 소통하면서,
제기된 정책과제들을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작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권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